

# 지역에너지계획과 시민참여

## \_현황 그리고 질문들

한재각(운영부소장)

정의로운 전환을 위한

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

# 지역에너지계획 그리고 시민참여 현황

# ‘지역에너지’\_공식적 의제화 시작

- 대규모 중앙집중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문제점과 소규모 지역분산적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 요구
  - 위험한 핵기술의 이용,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의 대량 배출, 지역공동체에 대한 피해와 억압, 비민주적 의사결정 등
  - 2000년대 중반부터 소규모 지역분산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상상하면서 ‘지역에너지’에 관한 논의와 실천들이 꾸준히 진행
- 2011년의 후쿠시마 핵사고와 “밀양 할매”들의 초고압 송전탑 반대 운동
  - ‘지역에너지’에 관한 관심은 사회운동 차원을 넘어서 지자체의 공식적인 의제화
  - ‘탈핵에너지전환 도시선언’(2012년)과 서울-경기-충남-제주의 ‘지역에너지전환 공동선언’(2015년) 발표,
  - 몇몇 광역지자체들의 혁신적인 에너지정책(서울시의 ‘원전하나줄이기’사업) 추진
  - 최근의 ‘에너지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’ 결성

# 지역에너지에 관한 상이한 시각

- 시민사회/지자체의 시각
  - 지역에너지(Local Energy)를 “지역에서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효율 향상을 전제로 에너지 정책을 만들고 에너지를 생산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”(이유진, 2010: 37)
  - 2030/205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장기적인 에너지자립/전환 계획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증가
- 중앙정부의 시각
  - <에너지법>, 5년 단위로 광역지자체의 5년 기간의 ‘지역에너지계획’ 수립 의무화
  - 중앙집권적으로 수립·추진되며 핵·화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공급중심적인 국가에너지계획을 보조하는 역할.

# 지자체 지역에너지정책의 도전과 중앙정부의 반응

- 몇몇 광역지자체의 혁신적이고 독자적인 지역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집행
  - 법적 의무가 없는 기초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움직임
  - 국가에너지계획과의 불일치, 지자체의 독자적인 에너지 정책행보들은 중앙정부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에너지 권한을 잠재적으로 위협으로 간주
- 산업자원부의 ‘지역에너지계획’ 지침(2017)
  -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‘지역에너지계획’을 규율하기 위해서 새롭게 지침을 제시(이정필, 2017).

# 에너지 시민참여

# 왜 시민(주민) 참여가 중요한가?

## 1.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추진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저항과 갈등

- 삼척과 영덕의 핵발전 유치 찬반 투표
- 밀양과 청도 등의 초고압 송전탑 갈등
- 부산 등의 노후 핵발전소 폐쇄 주민 운동 등



## 2. 핵위험과 기후변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에너지전환의 현장과 주체는 지역과 시민

- 대규모 중앙집중적 에너지 시스템을 지역분산적 소규모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
- 공급이 아니라 소비 관리를 중심으로 정책의 변화,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하고 줄이는데 시민 참여가 핵심



한국 에너지시민의 등장

# 어느 차원/수준에서의 참여?



# 어떤 시민참여?



- 전화 여론조사?
- 공청회?
- 길거리 스티커 붙이기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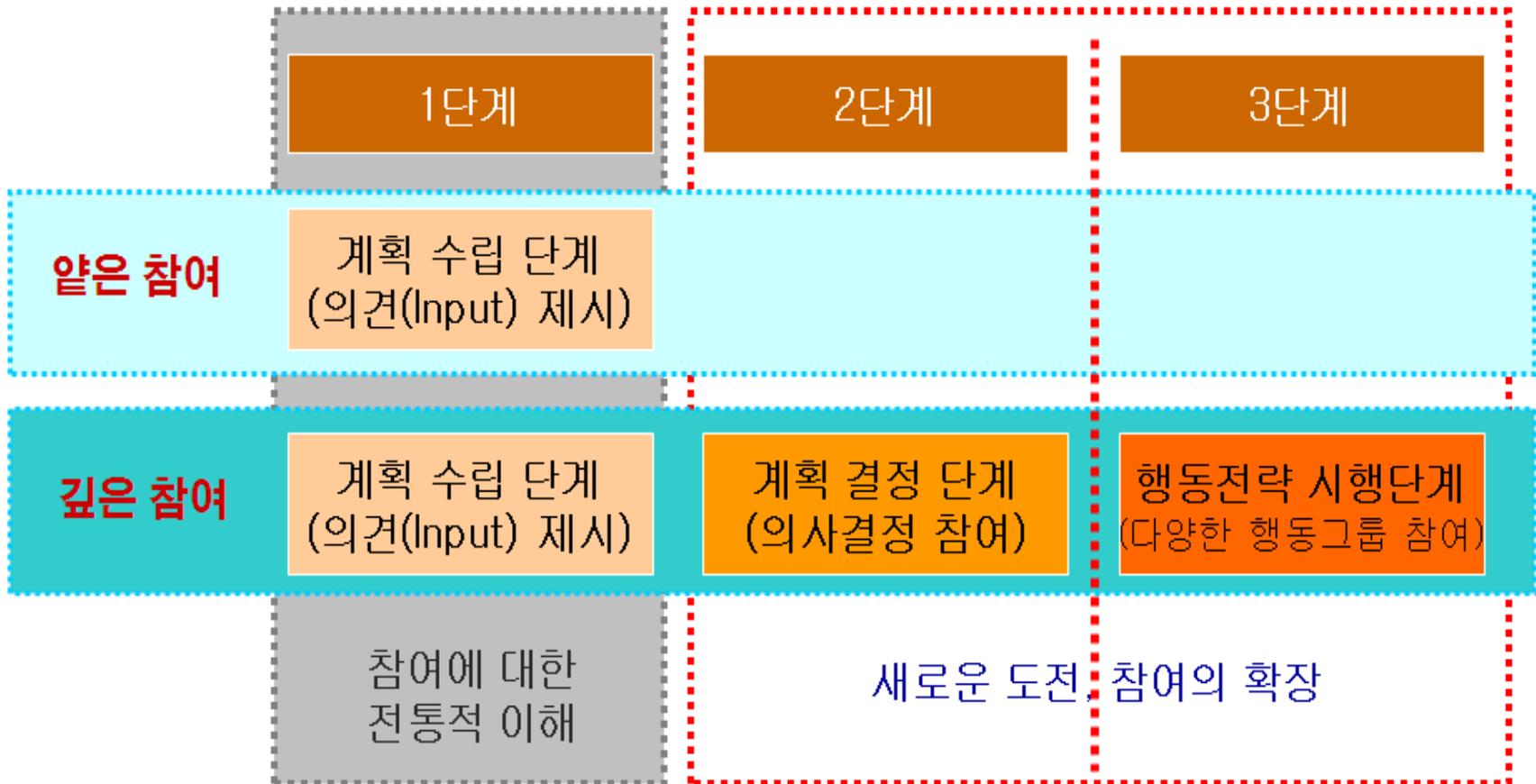


# 숙의적 시민참여!

선호취합적 참여제도	숙의적 참여제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람들이 '이미 가지고 있는' 의견이나 선호 취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의견이나 선호의 변화가능성 전제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추가적인 정보제공이나 토론을 고려하지 않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추가적인 정보제공이나 사람들간의 상호작용 고려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최종정책 결정단계에서 주로 활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정책결정을 위한 논의 '과정'에서 주로 활용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단기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중·장기간(일정기간의 숙의 과정 설정)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의견조사, 공청회, 자문위원회, 국민투표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합의회의, 시민배심원, 시나리오 워크숍, 포커스 그룹, 공론조사 등</li> </ul>
* 출처: 김명진(2005)	

기후변화나 에너지와 같이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여러 전문적 정보와 지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는 숙의적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

# 어느 정도나 참여?



# 한국에서의 에너지 시민(주민)참여 현황

## 국제적 수준

- 유엔 기후변화 협상 세계 시민회의(2015년)



-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등이 주관, 전세계 77개국 참여, 한국 가톨릭대 연구팀 진행.
- 일반시민 100명이 참여, 6-8명의 소그룹 토론하고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질문에 대한 투표를 진행

## 국가적 수준

- 전력정책 미래 시민합의 회의(2004년)
- 시민참여형 대안에너지 시나리오 개발(2015년)



- 시기: 2015년 5~11월(7개월)
- 주최: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.
- 시민패널(성, 나이, 직업, 15명)

## 지역적 수준

- 대구지역에너지계획 (2015년)
- 전주지역에너지계획 (2015년)



우리의 손으로 만드는  
전주 2025 에너지 안전도시 시나리오(지역에너지계획) 참가자 모집 안내

**“2025년 전주 지역에너지계획”**  
전주의 미래를 설계할 분을 찾습니다.



# (기초)지역에너지계획과 주민참여 현황

지역		제목	시기	주민참여 방식
서울	노원	탈핵에너지전환 종합대책	2012년	-
서울	성북	성북구 온실가스감축 행동계획	2013년 1월	-
서울	강동	지속가능한 기후환경도시 2030 실행계획	2016년 12월	-
경기	안산	안산시 지역에너지 조성계획	2015년 12월	지역에너지포럼/명칭 공모
경기	광명	광명시 에너지자립 및 주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	2017년 3월	에너지시민회의(시민기획단 49명)
경기	시흥	시흥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	2017년 3월	-
경기	군포	군포시 지속·자립 가능한 지역에너지 실행계획	2017년 4월	-
경기	김포	김포시 에너지 자립도시 실행계획	2017년 5월	-
경기	구리	구리시 에너지 자립도시 실행계획	2017년 6월	-
경기	안성	안성시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연구용역	2017년 7월	정보제공
경기	여주	여주시 지역에너지 조성계획	2017년 8월	정보제공
경기	양평	양평군 에너지자립 실행계획	2017년 9월	정보제공
경기	수원	수원시 에너지종합대책/지역에너지계획	2012년/2013년	-
경기	부평	부평구 주민참여형 기후변화 대응 세부시행계획	2015년 10월	정보제공/인식조사/시민단체 협의
경기	과천	지역에너지계획	2010년	-
강원	인제	인제군 에너지전환 시나리오	2015년 12월	-
전북	완주	완주군 지역에너지전환 기초계획	2013년	-
전북	전주	전주시 에너지안전(자립)도시 지역에너지계획	2016년 3월	시나리오워크숍(시민패널 50명)
전남	순천	순천시 지역에너지계획	2015년 3월	-

자료: 한재각(2017)

# 기초지자체의 독자적인 지역에너지계획 \_제도적 기반: 에너지조례

- 과천시, 수원시, 안산시 그리고 광명시는 에너지조례에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규정
- 과천시 <에너지기본조례> 제6조에서 명시
- 광명시 조례 제4조의 시장의 책무에서 명시\_“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 정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·시행”
- 안성시는 계획 수립 근거 조항은 있으나 의무 사항은 아니며, 여주시는 계획 수립의 근거 조항이 없다.

# 기초지자체의 독자적인 지역에너지계획 \_시민참여의 다양한 수준

-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계획 수립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알리고(안성, 여주, 양평)
- 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거나(부평),
- 전문성에 기초하여 선택된 사람들로 구성된 포럼/간담회를 운영하기도 했다(안산, 인제).
-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패널을 구성하여 숙의적 방식의 시민참여 과정을 조직하기도 했다(전주, 광명).

# 검토할 사례들

## 광역지자체

대구시의 사례	오용석(대구지속협 사무처장)
서울시의 사례	이유진(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)
경기도의 사례	안명균(경기도 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 실행위원장)
충청남도의 사례	여형범(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)

## 기초지자체

전주시의 사례	이정필(예정연 상임연구원)
안산시의 사례	류홍번(안산 YMCA 사무총장)
서울시 강북구의 사례	신근정(녹색연합 에너지팀장)

# 지역에너지계획과 시민참여 \_방법론 등에 관한 질문

# 세미나 질문들

1.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/집행에서 ‘시민/주민 참여’는 왜 중요하며, 무엇을 의미하는가?
2.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/집행에서 시민참여의 구체적인 방법론은 무엇인가?
3.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/집행에서 시민참여의 구체적인 양태와 성공/실패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인 요인은 무엇인가?
4.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은 어떻게 조화되어야 하는가?
5.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/집행시의 시민참여의 환경/조건들은 차이가 나는가?

# 시민참여 방법론의 질문(1)

## 1. 시민참여, 누가 참여하는 것인가?

- 민간 참여와 시민참여는 어떻게 다른가?\_특별한 시민(전문가)의 참여? 기업 등의 이해관계자의 참여? 시민단체 대표의 참여? ‘일반 시민’의 참여?
- 지역(기초지자체) 혹은 지역주민의 참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?

## 2. 시민참여의 수준과 범위는?

- 시민참여를 통해서 수렴하려는 의견은 무엇이고, 시민들이 결정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? (단순 의견 제시/의사결정의 참여/집행과 모니터링/평가)
- ‘일반시민’은 누구이며 몇 명이나 참여해야 하는가? (숙의성과 대표성의 트레이드 오프, 전문성과 시민성, 비용과 시간의 문제 등)

# 시민참여 방법론의 질문(2)

## 3. 시민패널들이 전문적 질문을 다룰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?

- 시민패널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, 그리고 다양한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
- 시나리오 기법의 활용?

## 4. 시민참여의 동기를 고취하고 지속/확장하는 방법은?

-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성공은 참여하는 시민들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지속 여부에 좌우.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?

# 제도적 기반과 효과에 대한 질문

1.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?
  - 누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책임을 지는가? 시민참여 방법론의 채용에 대해 누가 승인하는가? 그 결과를 누가 확정하는가?
  - (지자체 발주 용역의 경우), 과업지시서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?
2. 시민참여형 계획 수립은 집행에서도 효과를 발휘하는가?
  - ‘참여 효과의 가설’\_계획 수립에 참여하면 집행에도 참여하여 계획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.